

핫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8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이재명, 협치물꼬 틀까

오늘 시정연설 사전환담 대통령실 “격의없는 소통”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되는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났다.

민주당 권철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시정연설 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의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

그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정부 기념식 등에서 마주쳐 짧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사전환담에서의 만남은 현 정부 출범 후 두 사람이 사실상 처음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 ‘협치’의 물꼬를 트는 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야권을 향한 검찰·감사원의 전방위적인 수사·감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했고 사전환담에서 양측의 만남도 불발됐다. 올해 시정연설 사전환담의 경우에도 이날 오전까지 이 대표의 참석은 불투명했

다. 특히 당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대통령-여야 대표 3자 회동’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데다 사전환담이 5부 요인(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감사원장)까지 함께해 국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사실 불가능한 자리여서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밀도 있는 대화가 가능한 소규모 단위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했지만 진전 없이 끝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참석을 결정한 것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소통과 국정 기조 변화를 촉구하며 ‘책임 야당’ 면모를 부각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을 때면 사전환담에 참석하는 건 국회의 오랜 관례인데 이 대표가 2년 연속 불참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불통 기조를 거두지 않고 있어 불참할 이유가 훨씬 많지만 이 대표가 ‘대인배’로서의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인 56% “제사 계획 없다”

성균관, 현대적 권고안 내나 제사 음식·형식 간소화 필요

현재는 성인 열 명 중 여섯명이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제사를 계속 할 의향이 있는 이들은 네명 남짓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사 음식과 형식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성균관이 현대 사회에 맞는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30일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제례 문화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5.9%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고 반응했다.

제사를 지낼 계획이 있다는 답변은 44.1%를 기록했다. 현재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답한 이들이 62.2%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제사를 계속하는 이들이 대폭 줄어줄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간소화하거나 가족

모임 같은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41.2%)는 것을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시대의 변화로 더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27.8%였고, ‘종교적 이유나 신념을 이유로 든 응답자는 13.7%였다.

제사를 계속하려는 이들은 ‘조상을 기리기 위해서’(42.4%), ‘가족들과의 교류를 위해서’(23.4%), ‘부모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15.9%), ‘전통 유지’(10.0%)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제사 과정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자들은 제사 음식의 간소화(25.0%)를 지목했다.

이어 형식의 간소화(19.9%), 남녀 공동 참여(17.7%),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제사(17.2%), 제사 시간 변경(5.3%) 등의 순이었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이런 조사 결과 및 현대 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해 ‘현대화 제사 권고안’을 내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세계도시포럼 막 올랐다

킨텍스 그랜드볼룸 지속가능 도시 논의

30일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고양시가 주최하는 ‘2023 세계도시포럼’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 국내외 경제·공간·문화·교통 분야의 도시 문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닿 예정이다.

30일 열린 개회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요한 시스타이언스시티 전 씨이오(CEO) 요한 오드마크(Johan Odmark), 케이에스브이 글로벌(KSV Global) 공동창업자인 스펜서 남(Spencer H. Nam), 텃거스 대학교 석좌교수 피유시미타 타쿠리아(Piyushimita Thakuria),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 도시미래연구소장 크리스토퍼 페티트(Christopher Pettit)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대전환 시대, 미래를 위한 도시혁신’을 주제로 4개의 세션과 소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30일에 열린 문화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사실 불가능한 자리여서다.

이어서 진행되는 교통 세션은 ‘지속 가능한 지능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소주제로 문화계 인사와 한국



30일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세계도시포럼이 개최됐다. 이동환 고양시장과 행사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승철 기자)

문화 전문가가 산업적 관점에서의 문화 육성과 도시 성장의 관계를 논의한다.

31일에 진행되는 경제 세션은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과 ‘도시경제’라는 소주제로 진행된다. 미래 첨단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의료·인공지능 산업 등 경쟁력과 생존력을 갖춘 미래 산업을 발굴하고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의 경제 성장 해법을 모색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교통 세션은 ‘지속 가능한 지능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라는 소주제로 문화계 인사와 한국

은 새로운 차원의 도시 교통망 설계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기술적 문제를 점검하고 현재 교통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이동수단(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은 공간 세션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도시 계획’을 소주제로 도시 모델의 미래를 그려본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한 미래도시 공간 설계 예시와 세계의 성공적인 디지털 도시 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올해 고양도시포럼이 세계도시포럼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만큼 이번 포럼이 도시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국제 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정책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시장은 “감염병(팬데믹), 기후 변화 등 각종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승철 기자

‘글로벌 블록체인 인천 컨퍼런스’ 개막

인천시, 블록체인 리더들과 웹(Web) 3.0 기술 교류의 장 블록체인의 마스터플랜 발표

인천시는 30일 ‘2023 글로벌 블록체인 인천 컨퍼런스(GBIC 2023)’의 막이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블록체인, 인천으로의 항해를 시작하다’를 주제로 시민 일상 적용되는 웹(Web) 3.0 기술과 기업이 소통하는 기술 교류의 장으로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컨퍼런스에는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폴리곤 아시아태평양

대표 마룬 켈레그(Marouen Zelleg), 5G 얼라이언스 위원장 라티프 라디드(Latif Ladid), 토큰라이즈 최고경영자(CEO) 제임스 벨딩(James Belding), 크립토닷컴 한국 대표 패트릭 윤(Patrick Yoon),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정우신 원장 등 국내·외 블록체인 관계 인사가 참여했다.

개막식은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인천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샌드아트 영상 공연을 시작으로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의 환영사 및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안철수 국회의원 영상 축사, 기념촬영, 주요 블록체인 전시기업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 첫날 기조연설 연사로는 폴리곤 아시아태평양 대표 마룬 켈레그(Marouen Zelleg)가 폴리곤과 함께 성장하는 웹3 에코시스템(Growing Web3 ecosystem with polygon)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블록체인 기술 활용과 미래 금융 서비스’라는 주제로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대표가, 웹(Web) 3.0 시대 달라지는 일상과 비즈니스 혁신이라는 주제로 라티프 라디드(Latif Ladid) 5G 얼라이언스 회장이 각각 발표했다.

개막식에 방문한 주요 참석자들은 행사장 내 마련된 블록체인 기업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컨퍼런스 전시 부스에 참여한 기업들은 총 14개 사로 △마이스타픽-스마트 컨트롤

트 기반 투표 플랫폼 △(주)옵티모-블록체인 기반 바이오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주)우드라이브-블록체인 기반 관광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가자곰’ 개발 △(주)에이오2-환경활동 소셜 어플리케이션 개발 △(주)제이엔피메디-임상운영 및 데이터 관리 솔루션 개발 등이 있다.

특히 개막식 이후에는 인천시가 수립한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 허브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는데 마스터플랜에는 △시민참여도시 △지속성장도시 △첨단혁신도시 △기업친화도시 △글로벌 기술선도 도시를 5대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담겨있다. 이종삼 기자

경기도 공무원 보호 위해 ‘앞장’

민원인 대응요령 교육 위법행위 6천건 발생

경기도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돼 있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청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 및 법적대응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교육내용은 △특이민원 응대요령(폭언·장시간통화·폭력), 녹음·녹화요령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민원

인 위법행위 유형별 적용법률 △반복민원 처리방법 등이었다. 이와 함께 시군 관계자들이 실제 민원현장에서 발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 조치를 했던 사례를 발표해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방법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도와 시군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총 6293건으로 △폭언 4886건 △협박 1000건 △성희롱 31건 △폭행 150건 △소타 226건이었다. 이 중 신고 및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32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5.1%에 불과해 법적 대



경기도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노출돼 있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지난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북부청사와 경기도청에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경기도)

응에는 다소 소극적인 양상이었다.

열린민원실에서는 특이민원 등 경기도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절차 안내, 현장조사·법

률자문의회 등 초기대응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으며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고문변호사 선임, 고소·고발 등 기관차원의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김인창 기자

가평군 군부대 인적자원 끌어안기

군의 군민화 운동 전개 인구늘리기 사업 ‘온힘’

가평군이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군(軍)의 우리 군민화(郡民化) 운동을 추진할 계획에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 2021년 10월 행안부가 고시한 인구감소 지역 지정과 함께 지난달 기준 인구소멸 지수가 0.26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직면하는 등 지역의 장래 발전을 위한 청년층 인구가 부족한 현실에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가평군민의

역도 진행되는 등 군(軍)을 군민으로 포용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올해 안에 군의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정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군은 군부대와 상생 및 지역발전 모색을 위해 이미 군민화 운동을 시행 중인 철원·화천·홍천 등 인근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수요자와의 소통 회의, 군부대 관계자와의 사업 추진계획 토의 등을 진행해 왔다.

군 관계자는 “타 부대 전출 및 전역 후에도 다시 찾을 수 있는 제2의 고향 가평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지역 특성을 활용한 민·군·관 유대관계 강화 및 상호 이해증진 사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한편 군은 지방소멸 위기 및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국가사업(공모사업 포함), 도 지원 사업, 자체 사업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 140개의 인구정책사업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최근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을 컨트롤타워로 지정하고 인구 활력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본 프로젝트에는 △관광·체육·산업·교육 등 관계·생활 인구 100만명 증대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1000개 증대 △인구감소 대응 추진사업 정성평가 등 정주 만족도 90점 이상을 목표로 젊고 활력 넘치는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가평’ 비전을 실현한다는 계획 등이 담겼다고 군은 설명했다. 신영수 기자